

검찰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수수자”

“조사 없이 뇌물죄 추가기소 어려워... 지금 단계 뇌물죄 공여 부분이 인정되는지부터 살펴보고 있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라고 지칭했다. 최순실(80)씨 등을 거론하며 “다른 법 적용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은 있지만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지칭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지난 25일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거론하며 “뇌물죄에 대한 기소를 할 때 ‘뇌물수수자’를 조사하지 않고 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부인하든 자백하든 뇌물수수자를 조사한 다음에 기소하는 게 원칙”이라며 “뇌물공여자의 진술이 확실하다고 해도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뇌물죄에 대한 추가기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단계는 뇌물죄 공여 부분이 인정되는지부터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삼성, SK, 롯데그룹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제3자뇌물죄 적용을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대통령이 총수 일가에 대한 사면, 면세점 재승인 등 현안을 발미로 재발들로 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게 이 수사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렇게 받은 돈이 최씨에게 흘러들어갔다면 박 대통령에게 제3자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기한을 29일까지 못 박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박 대통령 측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뇌물수수자’ 관련 발언이 알려



한일군사협정 무효 선언 국의원당 정동영 의원 등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무효 선언 및 협정 폐기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 진화에 나섰다. 검찰은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검찰은 이와 같은 발표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해 7월과 올해 2~3월 대기업 총수들과 독대를 갖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20일 최씨 등에 대한 기소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창립부터, 출연기금 모금까지 대부분 불법행위를 박근혜 대통령이 계획하고 지시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뉴시스

늘푸른한국당 도당, 오늘 창당

이재오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참석

늘푸른한국당이 28일 전북도당을 창당한다. 100여명의 발기인으로 전북지역에서 깃발을 올릴 늘푸른한국당 전북도당 창당대회는 이날 전주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6층에서 열린다. 도당 창당대회에는 이재오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당위원장에는 임석삼(59) 전 한국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학장이 맡게 된다. 늘푸른한국당은 정의로운 국가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위한 정치로 3대 창당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또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과 지방분권, 행정구역 개편, 동반 성장, 남북자유왕래 등 4대 핵심정책을 발표했다. 늘푸른한국당 관계자는 “연말까지 전국 시·도당 창당대회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11일 서울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민주 “새누리당와 탄핵 연기협상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내달 9일 탄핵소추안 처리를 거부하며 연기 협상을 제안한 데 대해 “의사일정 자체는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새누리당 내부 논의에서도 사실상 탄핵에 많은 비중을 두는 의원들은 이견을 표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비박 심재철 “탄핵·개헌 병행 추진돼야”

비박계 심재철 새누리당 국회부의장은 지난 25일 “탄핵은 탄핵대로 진행되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에서 개헌도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두고 대선을 치를 것인가. 87년 이후 반복되는 대통령 임기 말 불행이 앞으로 재현되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되면 부결되면 아니면 또다른 방안이 진행되면 우리는 개헌을 통한 새로운 국가를 만날 수밖에 없다”며 “개헌이 필연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심 부의장은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일에 대선을 함께 치를지 아니면 개헌안 국민투표가 함께 행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늦추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이같은 개헌 논의가 탄핵에 대한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낼지도 모르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개헌은 개헌이다. 나는 탄핵에 찬성한다”며 “지금은 탄핵에 집중하고 새 정권이 탄생해 개헌을 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우리는 정권 장악 이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지금까지 여러 번 보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심 부의장은 이어 “혹시라도 난국이 지속되는 게 자신들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는 생각에서 개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최은희 도의원, 장애인인권연대 감사패 수상

조례 제정·도정질의·현장점검 등 장애인 위한 다각적 의정활동 노력 인정

최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이 장애인 인권 증진과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5일 전북장애인인권연대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최 의원은 도의회 입성 이후 지금까지 장애인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해왔다. 우선 최 의원은 지난 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무장애) 디자인보다 진일보된 유니버설 디자인조례를 제정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올해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권리 보장과 지원방안 마련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

다. 이외에도 올 6월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 장애인 관련 조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 저조한 이행실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장애인 인권 침해사태를 심층적으로 파헤쳐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도 행정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일반적인 시각과 달리 장애인의 대부분은 사고나 질병 등 후천적 장애인이 대부분이다. 나 자신도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장벽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행정의 제도적 관심이 배가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고민형 기자



국민의당 도당, 개소식 정권퇴진운동본부 결성식
국민의당 전라북도당은 지난 26일 전주시 서산동 도당 이전 사무실에서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천정배 전 공동대표, 도내 국회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지역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 및 정권 퇴진운동본부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김광수 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은 당원·도민과 뜻을 같이해 정권 퇴진운동본부를 통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정권 퇴진운동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당 개소식 참석자 전원은 개소식 직후 곧바로 서울 국민의당 당원보고대회에 참석했다. /고민형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8주년

주소: 부안군 부안읍 번영로 67, 202호
만복건설 주식회사 임직원 일동

扶來滿福